

더불어 민주당 산자중기위정조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5. 12. 8(월) 배포즉시	배포일시	2025. 12. 8.(월) 15:30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5.12.8.(월) 13:00~14:00,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
- 참석자
 - (黨) 김원이, 이언주, 김한규, 권향엽, 박지혜, 오세희, 이재관, 정진욱, 허성무 위원
 - (政)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

- ☐ 오늘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김원이 의원)와 산업통상부(김정관 장관)는 당정협의를 가졌다.
- ☐ 당정은 산업통상 분야 지역·민생 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
< 지역·민생 현안 >

- ☐ 당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·민생 정책으로 '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'과 'KS 인증 제도 개편 방향'을 논의하였다.
- ☐ 먼저,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경쟁국의 대규모 증설,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편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정부는 지난 8월에 제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원칙, 방향, 로드맵에 따라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,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여수·서산을 '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' 및 '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'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.
 - 당 차원에서는 지난 12.2일 「석유화학산업특별법」 제정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과 고부가·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.
 - 당정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승인 및 이행해 나가는 한편, 향후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·친환경화를 위한 R&D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당정은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KS 인증제도를 60여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- 로봇 등 첨단산업에 있어 설계·개발자 중심의 OEM 제조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,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'공장심사' 중심의 KS 인증 방식을 개선해 '제품심사'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 - 또한, KS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KS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,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.
 - 당정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'26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며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「산업표준화법」 일부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〈 중점 추진 법안 〉

-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*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.

*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,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

- 먼저, 지역균형성장,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절차,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등을 담은 「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」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지방투자촉진특별법」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.

-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산업·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논의된 주요 지역·민생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 끝.